

■ 창원 동읍, 북·대산면 발전 전략 발제 요지

# “도심 성장 한계로 농촌 규제 풀어 개발해야”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기획실장이 5일 경남신문과 권경석(창원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서 대산면은 동남권 첨단 복합물류단지, 북면과 동읍은 배후주거지로 각각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읍, 북·대산면의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2020창원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현재 도시부는 천주산~정병산~불모산~장복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분지내 개발 가능지가 전무하다”고 진단한 뒤 “마금산, 백월산, 구룡산에 의한 계곡, 호수가 발달한데다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가 많이 있는 북면과 동읍의 전원부와 우량 농지가 있는 대산면의 규제를 풀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특히 “창원의 나이별 인구를 분석하면 2005년 35~49세 인구가 가장 밀집한데 반해 오는 2020년에는 50~64세가 가장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령화 가속, 도시경제 활력 저하, 성장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동읍, 북·대산면의 전원부를 개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같은 관점에서 도시공간, 산

업, 인프라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도시공간= 중앙·상남동 중심의 지리적 중심점을 북서측으로 이동, 전원부에 주거지와 생활편의시설을 확충,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한다.

또 대산면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동읍과 북면에 배후 주거지를 만들으로써 현재 1도심-1부도심-3지역 중심을 ‘2도심(상남·중앙동, 의창동)-5지역중심(대방, 양곡, 동읍, 북면, 대산면)’ 체계로 바꿔야 한다.

◆산업=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읍·면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 성장축 북서측으로 이동 주거·생활 편의시설 확충 젊은 세대 정착 유도 산업·물류·주거 등 신규 기능 배치 통합시 중심 기능과 도농 불균형 해소

전략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세제 및 시설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기계산업을 지식·첨단화하고 창원대학교에 로봇공과대학을 설치하는 등 로봇클러스터를 만든다.

특히 대산면에 동남권을 배후지로 하는 첨단 복합물류도시를 조성, 연구·생산·물류·여가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IT기술을 접



목한 3D영상체험단지를 조성한다.  
39사단 부지를 후방산업의 메카로 지정, 컨벤션, 문화, 정보, 관광기능을 배치하는 동시에 공공행정 입지로 기능을 넓힌다.  
◆인프라=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창원역~대산물류단지~신공항~밀양역을 연결하는 신공항 전용철도, 동창원

IC~대산물류단지~신공항~남밀양IC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도로는 진동~마창대교~국도2호선~안민터널~국도25호선 우회도로~동읍교차로(덕산)~북면(국도79호선)~내서(국도5호선)을 연결함으로써 통합시 순환노선을 개발한다.

김 실장은 “창원시는 인프라와 소득 등에서 타 시에 견줘 생활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구 시가지, 도시-농촌지역의 이질감이 있다”면서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맞춰 도시 중심부를 북쪽인 39사단 부지로 옮기고 동읍, 북·대산면에 산업·물류·주거 등 신규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창마진 통합의 중심지 기능 뿐만 아니라 도농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에서 도시 역사성을 파괴하기보다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높이고 규모의 대형화를 피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순환개발 방식으로 순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원거주자에 우선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일부 지역은 원룸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고령화 사회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등 사회 흐름에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